“R&D 주52시간제 특례 절박… 초광역특구법 통과 절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기자간담회
韓서 1년 걸릴 사업 中선 3개월
근로시간 규제 글로벌 경쟁 족쇄

연구인력 주52시간제 특례 호소
건강권·임금 유지, 성과 중심 근무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인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특례 적용을 강력히 호소했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 법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R&D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25일 오후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밀리고 있느냐를 냉정히 보면 결국 ‘시간’과 ‘R&D’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중국 선전을 다녀오며 소름이 끼치는 경쟁하려는 의지를 느꼈다”며 “이 정도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중국 현지 사례를 들며 R&D 인력의 유연근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에 가있는 우리 기업(삼성전자 등) 현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1년 걸릴 프로젝트가 중국 현지에서는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한다”며 “중국은 페이퍼 워크나 ‘가짜일’ 없이 모든 일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시간 효율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52시간제 특례 적용이 ‘노동 착취’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는 블루칼라 기준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R&D 인력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 대상 인력의 고소득과 자발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 이그잼션(적용 제외) 형태로 논의될 수 있는 R&D 인력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일을 못하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얼마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노동부 허가를 받는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성과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절박하다는 표현은 중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성하고 했을 때 그럴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5극3특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지역 인재가 타지로 떠나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CPTPP에 대해서는 “한국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게 이상하다”며 가입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단 중단”이라며 “농민단체 등과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농업의 식량안보 차원 보호를 고려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 프로젝트(텍사스·원전·알래스카)와 관련해서는 미국 중간선거 국면 탓에 진도가 더디다고 했다. 텍사스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면서도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사업이라 주민 전기요금 부담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가 주지사와 상원의원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며 연방정부 추진력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 체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체코 산업장관이 12월 10일 방한할 때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막는다

3단계 선제적 보호대책 가동
신용보호·최대 1000만원 보상
금융권 이상거래 집중 감시

한국전력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3단계 선제적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피해 예방 서비스 안내부터 신용보호·보상 지원, 금융권 이상거래 모니터링 공조까지 묶어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3일 열린 고객정보 유출 긴급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사장이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사 역량을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명의도용과 비대면 금융거래를 막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은 지난 22일부터 ‘한전ON’ 공지사항에 안내문과 링크를 올렸으며, 알림톡·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이어간다. 유출 통지 고객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막는 금융위의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와 ‘엠세이퍼(Msafer)’ 또는 통신사 PASS·카카오뱅크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을 알리거나 막는 ‘휴대전화 무단개통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특히 고객들이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 NICE평가정보의 ‘지키미케어십’ 이용권을 무상 배부한다. 별도 신청 없이 한전에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되는 등록번호를 ‘나이스지키미’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불법 신용조회 차단과 본인인증 차단, 약관에 따른 피싱·해킹 금융사기 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상보험 혜택을 1년간 받는다. 이용권은 25~26일 이틀간 순차 발송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전과 NICE평가정보는 1년 경과 시 별도 해지 없이 자동 종료되도록 하고, 제휴사 마케팅 동의 요구나 부가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를 막아 이용자 부담을 낮췄다.

한전은 아울러 금융기관과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전은 24일 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쳐 유출 고객 대상 집중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으며, 은행 등 45개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에서 알바로 라리오(오른쪽 4번째)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IFAD, 개도국 농업 발전협력 확대

송미령 장관, 라리오 총재와 면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간 협력이 확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IFAD 측에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25일 서울 모처에서 알바로 라리오 IFAD 총재와 만나 ▲농업 협력사업의 성과와 기여 ▲한국인 진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 IFAD는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된 농업분야 국제 금융기관이다.

라리오 총재는 농식품부-IFAD 협력사업이 개도국의 농업 현대화와 소농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제14차 IFAD 기금(2028~2030년)은 기후변화 대응·농촌일자리 창출·청년 지원·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기여를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노사 함께 윤리실천 다짐
부당한 지시·청탁 거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사 양측이 함께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지시 및 청탁에 대한 거절’ 등을 선언했다. 지난 24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나주 본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창국 사장직무대행과 서권재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윤리경영 관련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aT 노사는 ▲직위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 준수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부당한 지시와 청탁의 단호한 거절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따른 거절’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업무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축평원, 정부혁신 박람회서 AX 성과 공개
AI 기반 축산물 품질평가 혁신
등급판정·AI 비서 체험존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기관의 AX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AX란 단순히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흐름 및 데이터 활용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축평원은 2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행사장 내 ‘AI 축산 랩(LAB)’ 부스를 설치하고 AX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축평원은 앞서 이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6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당시의 수상작 ‘등급판정의 눈, AI로 전환하다’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주요 전시 내용은 AI 기반 축산물 품질평가를 통해 등급판정 시간을 줄인 성과와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상품 개발과 농장 경영에 활용한 사례들이다. 등급판정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통업체·소비자의 구매 선택 및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출하 결정 등에 활용되는 과정 등을 조명한다.

AI 축산 랩은 부스 내 4개 전시 구역에서 AI 전환 성과를 관람객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체험형 콘텐츠가 특징이다. ▲축산유통 AX 성과 전시존 ▲AI 등급판정 장비 체험존 ▲‘축산 AI 비서’ 서비스 체험존 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윈윈 아너스’ 선정
수자원공사, 中企와 수도시설 보안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사업인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AI 확산으로 핵심 기반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개발·실증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4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수여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 과정과 공동 성과를 종합 심사해 모범 사례를 뽑는다. 공사는 2024년 데이터 개방 플랫폼 ‘워터라운드’를 통한 디지털 물관리 솔루션 개발, 2025년 대청댐 지역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친환경·탄소중립 모델 구축에 이어 올해 보안 기술 협력으로 상생 영역을 넓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사용자 인증 보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센스톤과 성과공유제를 통해 추진한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 개발 및 실증이다. 양측은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증·접근 통제 체계를 구축해 검증을 마쳤다.

/세종=한용수 기자